광주·전남 청년 유출 심각한데…매입임대주택 정책도 외면

올해 마지막 모집 4202호 중 광주 65·전남 7호 배정…전체 1.7%

대책·정책 모두 수도권 쏠림…LH, 신혼·신생아 물량 전남은 '0'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유독 광주·전남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서도 전체 물량 4202호 중 광주·전남에는 고작 72호만 배정됐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과 공급 물량 등의 호남 소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방 청년을 위한 주거 환경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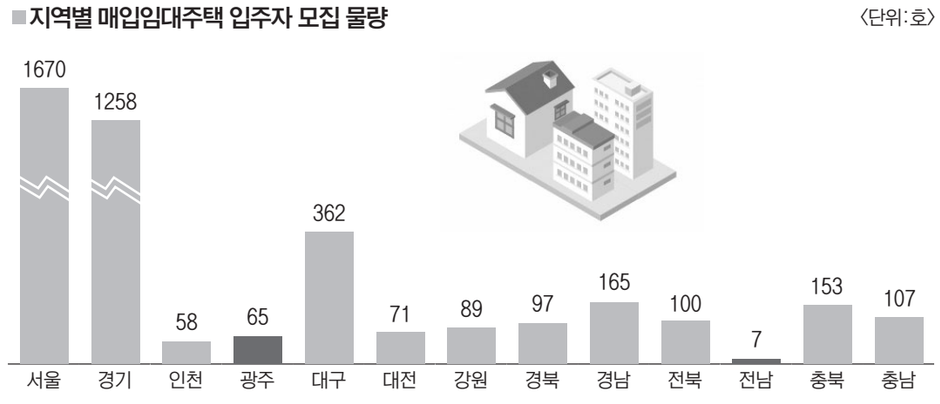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 등 총 420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별 배정 물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이 1670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58호, 대구 362호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65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해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 공급량의 1.7%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광주·전남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84호 가운데 광주는 26호, 전남은 7호에 불과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전국 1917호 중 광주는 39호 뿐이었다. 전남은 아예 배정 물량조차 없었다.



올해 전체 물량을 분석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올 한 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총 1만 6723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만 9843호에 달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공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광주·전남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인구 감소 현상도 심각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의 물량 배분 구조가 반복되면서 지방 청년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주거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원스톱' 지원

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과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유스타트(유스+스타트 합성어·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한 LH 주거 생활 지원사업 프로그램)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관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 지원 등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 홍보와 제도 개선 검토,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 발굴·연계와 청년 대상 생활지원 사업 기획·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이 본격화된 만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더 촘촘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H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된 '원스톱' 지원 창구다.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지원 사업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세미나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노후 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1기 선도지구 대상'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후 계획도시의 통합 재건축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광주·함평 빛그린 산단 산업용지 6필지 공급

LH 광주전남본부,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입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1단계(광주·함평)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추첨 경쟁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유치 업종인 자동차 산업, 디지털정보산업, 광산업, 첨단부품소재 업종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조성 중인 407만㎡ 규모로 광주, 함평, 나주 등 주변 지역 간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빛그린 1단계 구역의 유치 업종별 각 2필지로 공급단가는 82만원/3.3㎡다. 인근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다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주변이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다.

필지당 면적은 2400㎡~7600㎡이며 공급 금액은 5억 9000만원~18억 8000만원이다. 대금 납부 조건은 2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로 계약 체결일에 공급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입주·분양 절차는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LH가 함께 진행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 관련 절차를, LH는 공급·분양계약 관련 절차를 각각 담당한다.

분양·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오는 1월 6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1월 13일까지 입주 신청·심사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함평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LH는 입주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월 14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분양 대상자는 1월 2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함평사무소와 입주 계약을, LH와 분양 계약을 차례대로 체결하면 된다.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를 확인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주 심사에 대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함평사무소에 확인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LH, 한국장학재단에 3억 기부

150명에 200만원 씩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장학재단에 3억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부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가계 소득과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생활비·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생 선발과 운영은 재단이 담당한다.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 장학금은 10억원, 수혜자는 500명에 이르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HUG, 전자계약 임대보증 보증료 10% 할인

전자계약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10%를 할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위해 오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건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 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허그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해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료 할인 제도를 통해 보증료 경감과 서류 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